

인사 갈등에 짝 막힌 '7월 국회'

3野, 宋·趙 임명철회 압박 여가위·농해수위 추경 심사 한국당·바른정당은 불참 與, 한국당 방문...빈손 귀가

빈손으로 끝난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도 좀처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청와대는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보수 야당은 이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추경안 심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야 3당 송영무·조대업 사퇴 공조=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5일 부적격으로 판단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업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거듭 압박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송영무·조대업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0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정말 이분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더 큰 파국과 저항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 간사인 한국당 임이자, 국민의당 김삼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조대업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조 후보자를 둘러싼 3가지 위법 의혹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추경 심사 난항=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방침을 세웠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협조할 수 없다는



농해수위 추경 제안설명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장이라 추경 논의에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석수를 볼 때 민주당과 추경에 협조적인 국민의당, 정의당만으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과반 확보가 가능하지만 보수야당을 뺀 심사 자체가 여당엔 정치적 부담이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본심사 기일을 6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에 '예결위 심의 30분 전인 6일 오후 1시30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 기일을 지정해 통보했다.

민주당은 일단 예결위 상정 전 가능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이 위원장

을 맡은 여가위와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한 뒤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회의에는 추경 보이콧을 선언한 바른정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또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는 추경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보수야당과 차별화한 입장을 보이며 추경에 협조했다. 그럼에도, 국민의당이 송영무·조대업 후보자를 두고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임명 강행'이 현실화된다면 추경 처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해법은 난망(?)=일단 보수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서 추경 처리 해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 있는 정 원내대표 방을 찾아가던 우 원내대표는 인사와 추경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민생 문제인 추경 처리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결국 인사문제 때문에 막힌 것이 아니냐"면서 "인사에서 정부·여당이 잘 생각을 해서 안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에 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재연 "사법부, 민주화 받아들여야"

대법관 인사청문회...자녀 불법 조기유학·세금 탈루 공방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고 사법부를 향해 해선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를 불법으로 조기 유학 보냈고, 변호사로서 세금을 탈루한 전력이 있다는 자유한국당 광상도 의원의 지적에 사과했다. 광 의원은 "조 후보자 장녀는 1999년 중학교를, 차녀는 1999년, 삼녀는 2007년 각각 초등학교를 자퇴 후 유학을 갔다. 18년간 유학비만 10억여원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초·중학생 해외 유학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불법 인지 여부를) 알 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겠다. 불법인지 미처 알지 못했던 점을 죄송스

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 의원이 "조 후보자가 세무조사를 두 번 받았고, 한 번은 역대를 넘어가는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관의 영(令)이 살리 없다"고 비판하자, 조 후보자는 "처신에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2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온 재야 출신답게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피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사법의 민주화 요망(要望)이 크다"며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관예우 관련에선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떻게든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국민의당 호남당원 집단 탈당 없어"

권은희 "당원 변화 0.2%뿐"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으로 공지에 물린 국민의당이 5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호남당원 집단 탈당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탈당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가뜩이나 흔들리는 텃밭 민심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선 셈이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초의원들이나 핵심 당원들의 이탈 사태가 현실이 될 경우 당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어

떻게든 이런 원심력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인 권은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지역 당원의 집단탈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시당 차원에서 관리하는 당원 현황자료를 보면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대국민사과 이후 10일이 지난 지금까지 당원 수의 변화는 0.2%에 불과하다"며 "변화가 거의 없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최경환 "임대로 상한 재산정 나서야"

국토부 추경 심사...김현미 장관 "제어장치 마련하겠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북구 을)이 ㈜부영의 '임대로 폭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적극 호응하면서 광주 북구 첨단2지구 부영 임대아파트(1772세대)를 비롯한 광주 1만 3천 세대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짐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전망이다.

5일 최 의원은 국토부 추경안 심사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부영이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 인상을 통보, 전국의 부영임대아파트에 입주한 21만 세대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 재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영이 정부의 자리 용자와 주택 보증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료를 최고 상

한선까지 인상한 것은 기업 윤리에 반하는 것은 물론 서민의 고통을 짜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광주 북구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의 경우 3년 사이 임대전세금이 무려 2700만여 원이나 인상됐다"며 "올해도 5% 상한액인 1000여만 원 인상을 통보했다"고 지적, 적정한 임대료 재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사업주가 임의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사드 조속 배치" vs 與 "계획대로"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여야 北 미사일 발사 놓고 충돌

국회 국방위원회의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충돌했다.

보수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도발을 막으려면 조속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사드는 계획대로 배치되고 있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정부는 대북군사억지력을 키워서 북한이 꺼릴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같은 의지가 없다"며 "사드 연내 배치가 가능한가"라

고 추궁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현재) 사드 발사대 2기만 배치됐다. 사드가 완전히 역할을 하려면 한 포대가 배치돼야 하는데 국방부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듣자 듣자하니 과하다"면서 "사드가 ICBM을 막는 무기는 아니지 않나. 사드배치 계획이 형용어인 것이 없다"고 보수야당 측 주장에 반박했다.

ICBM 등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구축하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이 완성단계에 있다"며 "우리 군은 2020년이나 돼야 킬 체인(Kill-Chain)이 완성될 텐데 너무 늦다.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병행하면서 시급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주국방이다. 한·미 동맹은 기본이고 우리 스스로 전략자산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한·미 군사훈련을 보기는 했지만,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ICBM 추적과 관련해 '우리의 레이더망으로는 ICBM급 미사일의 모든 과정을 추적 못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뒤 "미국의 군사위성 레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1000여 발을 갖고 있는데 그 중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단거리와 중거리 즉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등이다"라며 "적 미사일 파괴, 요격, 사용 억제 등 적을 응징하는 개념들을 종합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